

## 종합·해설



# 영산강 물 하루 10만t 광주천에 흘려보낸다

광주천에 영산강 상류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사업이 올해 설계에 착수,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광주천에는 하수처리장 처리수 10만t를 상류에서 방류,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12일 “모두 300억원을 들여 영산강 산동교에서 맑은 물을 취수해 광주천에 흘려보내는 물순환형 수변도시사업을 본격

광주시 300억원 들인 유입 공사 내년 착공

6.1km 취수관 매설…1.7km 생태하천도 조성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공모에서 광주천이 선정되면서 지원이 확정된 180억원과 시비 120억원으로 북구 동립동 산동 저류보내 취수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제1하수처리장까지 6.1km 구간에 지름 1.2m의 취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기존 하수처리장 송수펌프장(영산강과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광주천 상류 방류구까지의 송수관은 그대로 사용된다. 전체 길이 12km에 이르는 지름 1m의 송수관은 원지교

(5만t), 중심사전 축설마을 앞(2만t), 고등교(3만t) 등 3개 지점까지 나누어 매설돼 있다.

광주시는 이 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10만t의 고도 처리수를 광주천 상류로 끌어올려 하천 수량을 유지해왔으며,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방류는 중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0만t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수를 끌어올리는 데 매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영산강 수계에 조성되는 승

촌보와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광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영산강과 광주천의 합류지점부터 하류까지 1.7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천에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이 공급될 경우 주변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지난해 발생된 수달 등 동·식물 서식지에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심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광주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도시균형발전위 17일 첫 회의

5개구 주민대표·시, 구의원 등 참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경계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

안해 무엇보다 경계조정을 중점적

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미 거론된 바 있는 북구 두암 3동과 풍향동을 동구로, 북구 동립동과 운암동 일부를 서구로 조정하는 안이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 월산 4·5동을 서구로 이전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인구가 적은 남구가 인구가 많은 서구로 동을 조개주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현실성이 낮다.

광주시는 오는 2012년 4월 국회의

원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

는 3월까지는 경계조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간 경계조정 논의의 중심

에 있는 서구가 지역주민 대표 추천

을 거부해오다 뒤늦게 주민자치위원장을 추천하는 등 자치구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커 이를 조율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구는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내일 KAVO 이사회 핵심 임원진 교체 주목

F1(포뮬러원)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이사회가 14일 열릴 예정이어서 정영조 대표 등 핵심 임원진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의결될 지 주목된다.

KAVO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정영조 대표와 장홍호 기획마케팅 본부장, 김연수 건설본부장 등 KAVO 핵심 임원진에 대한 해임요구안 및 주주총회 소집안을 처리한다.

이날 이사회는 6명의 재직 이사

중 4명의 이사들이 소집을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영 성과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KAVO 안팎의 해석이다.

특히 전남도가 F1 대회를 대회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르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한데다, 지난해 마케팅·경기장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했던 KAVO 기능 축소를 공식화한 이후 임원진

교체를 안건으로 열리는 이사회라는 점에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정된 안건이 정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안인 만큼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주주총회로 넘어가 최종 승인되면 전남도 구상대로 KAVO 조직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되지만 부결될 경우 KAVO와 전남도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올해 대회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지일기자 dok2000@kwangju.co.kr

##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서 사퇴까지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과다 급여·재산 증식 의혹…與 부적격 판정 결정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내정된 이후 1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장 후보자가 재산 등의 문제로 종도에 나마한 것은 최초며 참여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9월에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가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내정 당시부터 야당으로부터 ‘회전문 인사’라는 등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는 등 혼란을 예상됐다.

특히, 대검 차장 퇴직 이후 법무법

인에서 7개월 동안 7억원을 받는 등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크게 악화됐다.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액수가 많은 만큼 전판에 우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폰서 의

혹까지 제기하면서 과문은 더욱 확산

됐다.

지난 4년간 신고된 정 후보자의 예금증가액이 7억1000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최소한 1억9천만원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민간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총리실 공직지원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정적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10일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며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여당으로부터도 사퇴 압력에 직면한 정 후보자는 고집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를 뒤인 12일 오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한 뒤 감사원장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MB정부 후보자 사퇴일자

▲ 2008.2.24=‘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 의혹’ 이준호 여성장관 내정자 사퇴

▲ 2008.2.27=‘대북관 논란’ 남주홍 통일장관, ‘부동산 투기 의혹’ 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 사퇴

▲ 2009.2.10=‘용산참사 책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 2009.7.14=‘스폰서 의혹’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사퇴

▲ 2010.8.29=‘박연자 의혹’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위장전입 및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 신재민 문화장관, ‘쪽방촌 투기 의혹’ 이재훈 경찰장관 내정자 사퇴

## 區간 경계조정 해법 나올까

광주시가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그에 따른 경계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광주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연다.

전문가와 5개 자치구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 위원회가 이론 시일 내 기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과 불합리한 경계 조정, 국회의원 정수 8명 유지 등을 위해 ‘광주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17일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39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산하에 자치구 경계 조정, 도시균형발전, 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등을 위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

광주시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승인

을 통해 5개 자치구의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온 바 있다